

미(美)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민관 원팀으로 총력 대응

- 1.15(목) 16시,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개최 -

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.15일(목) 새벽(미국 현지시간 1.14일) 발표된 미(美)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. 산업통상부(장관: 김정관, 이하 ‘산업부’)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.15일(목)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, 국내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.

1.15일(미국 현지시간 1.14일)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, 미 정부는 「무역확장법」 232조에 근거하여 1.15.(목) 00시(현지시간)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% 관세를 부과한다.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,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.

1단계 25%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,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,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(미국 내 데이터센터용, 유지·보수용, 연구개발용, 소비자 전자기기용, 민간 산업용 등)도 있어,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. 다만,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對美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(Tariff Offset Program)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.

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,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對美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.

김성열 실장은 이번 미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, “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

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하고, “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	책임자	과 장	이규봉 (044-203-4270)
		담당자	팀 장	이보라 (044-203-4271)



□ 회의 개요

- 목적 : 미국의 232조 반도체 관세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
- 일시 : '26.1.15일(목), 16:00~17:30
- 장소 :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
- 참석자
 - (정부) 산업부 산업성장실장(주재), 반도체과장, 미주통상과장 등
 - (업계)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피에스케이, 동진쎄미켐, LX세미콘,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

□ 진행 순서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6:00-16:05 (5')	• 모두발언	산업성장실장
16:05-16:10 (5')	• 미측 반도체 관세 조치 주요내용	산업부
16:10-17:25 (75')	• 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7:25-17:30 (5')	• 마무리발언	산업성장실장